

##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도이칠란드와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비교분석

박사 부교수 김 병 철

###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국제관례에 비추어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입힌 모든 피해에 대하여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일본은 이에 응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86페이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40여년에 걸치는 오랜 기간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식민지통치전기간 우리 인민에 대한 무참한 탄압살육을 감행하였으며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징병》, 《징용》, 일본군성노예로 강제련행하여 그중 100여만명을 살육한 죄행, 조선의 자연부원을 깡그리 략탈하고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파괴략탈한 죄행 등은 시효가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서 지난 시기의 모든 침략죄행들에 대하여 사죄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의 본질은 한마디로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끼친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죄하며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물질적배상을 하는것이다.

과거청산이 없는 조일관계정상화란 있을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는 일본의 파렴치한 책동을 같은 시대의 전범국으로서 성실한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시해온 도이칠란드와의 비교적분석을 통하여 과거청산이 일본의 법적, 도덕적책임이라는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 2. 본론

#### 2. 1. 과거침략력사를 대하는 상반되는 태도

지구의 동서방에서 식민지를 재분할하고 전인류를 노예화하려는 목적으로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던 파쇼적인 도이칠란드와 일본은 1945년 5월과 8월에 세계적인 반파쇼세력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패망하였다.

패전후 도이칠란드와 일본에서는 파쇼를 반대하는 진보적인류의 념원과 련합국들의 일치한 합의에 따라 채택된 포츠담선언과 같은 국제법적문건들을 수락한 새로운 정부들이 출현하였다. 이 정부들은 고유한 의미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질러 인류에게 커다란 참화를 들썩운 종래의 파쇼정부들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성

격을 띠었다. 따라서 새 정부들은 과거의 침략력사를 전면부정하고 사과시즘을 철저히 배격하는 립장을 전제로 하였다.

그것은 파쑈국가들에 의하여 감행된 침략의 력사를 전면부정하고 배격하는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서 중요한 정치적문제의 하나로 되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도이칠란드와 일본은 과거력사를 대하는데서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나치스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2005년 4월에 수상이 자국의 와이마르시에 있는 나치스시기의 부헨왈드수용소 희생자추모비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치스가 저지른 야만적인 행위에 대하여 전인류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반파쑈련합군에 의한 수용소해방 60돐 기념행사에서 《나치스가 저지른 범죄를 잊지 않는것은 도이칠란드의 도덕적의무로 남아있으며 ...도이칠란드는 과거를 변화시킬수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2014년 3월 7일에도 도이칠란드대통령 가우크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도이칠란드군이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그리스 서북부의 링기아데스를 방문하여 사죄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대통령 파플리아스와 함께 1943년 10월 3일 파쑈도이칠란드군이 그리스의 빨찌산이 도이칠란드군 사관을 살해한데 대한 보복으로 링기아데스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83명을 살해한 학살현장에 세워진 위령비를 찾아 화환을 진정한 다음 《수치와 마음속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도이칠란드의 이름으로 살해된 사람들의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빌며 무서운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머리를 숙인다.》고 말하였다.

과거침략력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도이칠란드수상이나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은 세계의 인정과 여론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전범국으로서 지구의 동방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죄악을 저지른 일본의 태도는 그와 상반되는 대조를 이룬것으로 하여 인류의 경악을 자아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쑈일본의 패망 60년을 맞는 2005년 8월 14일 당시 일본정부의 경제산업상 나카가와, 이전 총리 하시모토를 비롯한 고위정책들이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였고 8월 15일에는 후생노동상 히데히사, 환경상 유리코 그리고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는 초당파국회의원그루빠에 속한 47명의 국회의원들과 당시 자민당간사장대리 아베,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등 고위정책들이, 10월 17일에는 당시 일본총리 고이즈미가 야스구니진자를 련이어 참배하였다.

패망 70년이 되는 2015년 8월 15일에는 일본수상 아베가 야스구니진자에 제물비를 봉납하고 총무상과 국가공안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의 각료들, 모두가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에 소속되어있는 60여명의 국회의원들도 무리로 야스구니진자에 찾아가 참배하는 소동을 벌리었다.

일제패망 73년을 맞는 2018년 8월 15일에도 일본 초당파국회의원들이 야스구니진자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군국주의망령들에게 참배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수상 아베는 내외여론이 두려워 참배는 못하고 자민당총재의 자격으로 야스구니진자에 제물을 봉납하였다. 결국 아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식으로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간접참배를 하였다. 아베를 대신하여 진자를 찾은 자민당 총재특별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아베는 선조

영령들께 꼭 참배해주기 바라며 직접 참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속을 털어놓았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매해 반복되고 날이 감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있다.

그러면 량국의 당국자들이 찾아간 도이첼란드의 부헨왈드수용소와 일본의 야스구니진자는 과연 어떤 곳인가.

부헨왈드수용소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히틀러악당들이 유럽의 무고한 인민들과 유대인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학살한 범죄를 고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비가 세워져있는 력사의 증견물이라면 야스구니진자는 파쇼일본이 감행한 해외침략전쟁에서 죽은 전몰자들, 지어는 도조 히데끼와 같은 수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어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이다.

과거의 침략죄행을 규탄고발하는 강제수용소와 과거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죽었거나 전범자로 처형된자들의 명복을 비는 신사, 그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는 두 장소를 찾은 두 나라 정치인들의 걸음은 그들이 과거력사를 어떻게 대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도이첼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나치스가 감행한 침략과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한것은 물론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도이첼란드는 오래전부터 히틀러나치스의 침략력사와 범죄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세계앞에 여러차례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나치스패망후 새로 출현한 도이첼란드정부는 나치스시기의 력사를 침략과 범죄로 얼룩진 부정의의 력사로 규정한 새로운 력서관을 국가정치와 사회문화전반에 구현하였다.

이에 따라 뉴른베르그국제공판이후에도 스스로 나치스전범자처벌을 위한 국내특별법을 제정하여 나치스정부의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하고 공직취임을 배제하였으며 이전 히틀러제국의 침략력사와 죄행을 전면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규탄배격하며 시효를 두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는것을 정책으로 집행하여왔다.

실례로 2014년 2월 20일에 도이첼란드의 바덴 뷔르텔베르그주 수사당국은 변성명하고 숨어살던 88살, 92살, 94살 고령의 이전 수용소간수들과 나치스친위대원들을 구속처형하였다.

이 사실은 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도 나치스의 범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도이첼란드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있다. 패전후 출현한 도이첼란드국가와 정부의 대통령 및 수상, 관리들은 나치스가 인류앞에 저지른 침략과 범죄에 대하여 세계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국들에 진심으로 되는 사죄를 표명하였으며 외국방문시에도 포로수용소들을 비롯한 나치스의 만행지나 희생자추모비를 방문하고 꽃을 증정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도이첼란드정부는 과거침략에 대한 사죄의 의미에서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영원히 잊지 않고 재발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자금을 지출하여 나치스시기의 수용소들을 비롯한 만행시설들을 복구하고 희생자추모비를 건립하며 그에 대한 참배를 장려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2005년 도이첼란드정부가 나치스의 범죄를 고발하는 력사적증거물인 부헨왈드수용소 추모비수복을 위해서만도 100만€를 지출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특히 도이첼란드정부는 새 세대들에게 철저한 반나치스력사교육을 실시하였다.

패전이후 히틀러의 나치스제국과 정치적으로 결별한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나치스의 패망후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문제로 보고 그 어떤 외국이나 편향도 없이 나치스시기의 반인륜적범죄를 새 세대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어 그들이 과거의 범죄를 증오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후 도이칠란드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발전을 지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나치스의 침략을 당했던 유럽나라들이 도이칠란드를 이해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도이칠란드의 이러한 성근한 자세와 진심어린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나 나치스의 침략과 만행을 겪었던 피해국들의 인정은 물론 전세계평화애호력량의 동정을 받았다.

그러나 패전후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출현한 역대 일본정부와 정계의 고위인물들은 죄악에 찬 과거 역사를 한사코 부정하고 외국은폐하며 심지어 정당화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과거사 특히 조선침략사를 부정외곡, 미화분식하여 온 일본정치인들의 망언과 정부의 외국된 역사교육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이미 1953년 10월 15일 제3차 남조선—일본회담 본회의에서 일본측수석대표 구보다강이찌로는 일본의 식민지통치는 《조선에 유익하며 은혜를 준 면도 있다.》고 하였으며 제7차회담 일본측수석대표 다까수기 싱이찌는 1965년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였지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였다. ...창씨개명도 좋았다. 조선인을 동화시켜 일본인과 같이 취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지 착취라든가, 압박이라든가 하는것은 아니었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였다.

1974년 1월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당시 수상 다나카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과거 조선강점시기를 《합방시대》라고 부르면서 《조선사람들은 일본이 이 시기에 김을 재배하는것을 가르쳐준것을 감사히 여기고있으며 일본의 교육제도를 지금도 지킬수 있는 훌륭한것이라고 말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을 심히 모독하고 과거침략사를 미화분식하였다.

1980년대이후에도 일본의 정계인물들은 앞을 다투어 공공연히 과거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는 망언을 연발하였으며 그것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더 로골적인 형태를 띠었다.

특히 일본의 극우익적인 호전분자인 이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2003년 10월에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고 과거를 찬양미화하였고 2009년 4월 22일에도 《유럽선진국에 의한 아시아식민지통치에 비해서 일본이 한것은 오히려 부드러웠고 공평했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일본정계에서는 일본이 서명하고 인정한 전범국가로서의 일본의 패전과 전후처리를 규정한 국제문건들까지 부정하는 망언들이 탕탕 튀어나왔다.

일본수상 아베는 2013년 3월 12일 중의원에산위원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범자들을 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관련하여 《대전에 대한 총화는 일본인들자신이 아니라 이른바 연합국측의 승자들의 판단에 의해 단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일본을 《적국》으로 규정한 국제사회의 판결까지 전면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일본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외국된 역사교육도 실시하고있다.

일본의 역사교육은 한마디로 그 내용에서 과거에 대한 외국은폐, 그 실시에서 정부의

직접적개입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이것은 2015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에서 통과되어 교육에서 리용되고있는 《후소사》판 중학교용력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의 내용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이 역사교과서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대, 중세의 역사를 일본의 비위에 맞게 날조하고 깎아내린것은 물론 특히 일제의 조선침략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외곡서술하였다.

교과서는 조선침략을 제창한 《정한론》이 일본의 개국권고를 거절해온 조선의 태도가 무례한데로부터 사무라이들속에서 주장된것으로, 조선이 로씨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곤란하므로 일본이 할수없이 로일전쟁을 진행한것으로,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을 병합한것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악독한 식민지노예화와 민족말살, 강제련행 및 대학살만행은 얼핏 스치거나 《소요》가 있었다는 식으로 침략적본질과 죄행을 외곡, 은폐, 정당화하고있다. 교과서는 전대미문의 일본군성노예범죄내용을 아예 삭제(2001년판에서는 외곡서술)하였으며 일제의 조선강점통치가 《조선의 근대사를 도왔다.》고 외곡서술하는 등 과거 조선침략사를 공공연하게 미화하고있다. 또한 조선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의 《령토》로 서술하고 표지에 독도의 사진까지 받치였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고등학교용력사, 지리교과서에도 독도령유권문제, 일본군성노예문제, 창씨개명과 야스구니진자참배문제 등 여러가지 주요한 역사문제들이 외곡서술되어있는데 그 정도는 중학교용력사교과서의 외곡보다 더 우심한 형태를 띠고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외곡은 단순히 일부 어용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정부와 극우익적인 군국주의정치세력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데 그 위험한 특징이 있다.

《최신일본사》를 집필한 이른바 학술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하나만 보아도 일본자민당의 이전 역사검토위원회가 정치적배경이 되고 여기에 밝은 일본국회의원련맹,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모임 등 자민당내 극우보수정치조직들과 전 수상, 문부과학상 등 전직, 현직 정계인물들의 정치적지원, 가시마건설, 스미토모제철기업들,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 100여개 대기업체의 막대한 재정적지원 그리고 우익보수신문인 《산케이신봉》의 언론적지원을 받고있다.

일본정부가 외곡된 역사교육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고있다.

문부과학성은 2006년이후 고등학교용검정신청본 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다.》고 하면서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해있으나 남조선이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다.》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될것이다.》라고 규제한 제2차 세계대전시기 련합국들의 《까히라선언》과 패망후 일본의 령토를 규정한 포츠담선언, 《련합국최고사령부의 지령》 제677호, 제1033호 등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역사외곡행위이다.

문부과학성은 또한 《〈일본군에 의하여 위안부가 된 녀성〉이라는 문구도 일본이 가해자로 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녀성》으로 고치도록 하였고 그후에는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등 창씨개명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조선 및 아시아 침략시기 역사의 많은 부분을 저들의 비위에 맞게 고치게 하였다.

문부과학성은 검정에서 통과된 외곡된 역사교과서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를 비롯한 극우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종래의 교과서채택제도까지 고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채택률을 높임으로써 외곡된 역사교과서에 의한 교육범위를 넓히려고 책동하였다.

력대적으로 9.18사변 등 일제의 중국침략사를 부정해온 일본반동정부는 중국국내에서 과거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남경대학살판이 건립되자 2013년 12월 문부과학성을 내세워 과거 일제에 의한 남경대학살에 대한 서술이 불공평하다는 자민당의 개혁안과 근대 및 현대사의 역사적사실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따라 소, 중학교의 사회과목분야 교과서검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은 이렇게 과거사를 뻔뻔스럽게 외곡하고도 우리 나라와 중국 등 주변나라들이 강하게 항의하는데 대하여 《비판은 자유지만 일본이 그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사실들은 일본정부가 학자들에 의하여 집필된 교과서들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간섭하면서 외곡을 강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2014년 5월 유럽행각에 나선 일본수상 아베는 과거력사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은 도이칠란드를 본따 지난 시기의 침략죄행에 대하여 사죄하지 않을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망언함으로써 과거력사에 대한 전면부정이 일본의 립장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이 집요하게 과거력사를 부정외곡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일본의 침략력사를 부정의의 력사로 규정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국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관을 주입시켜 《강력한 일본》을 되찾자는데 있다.

## 2. 2. 과거죄행의 물질적배상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도이칠란드와 일본의 태도는 과거죄행에 대한 물질적배상에서 상반되는 대조를 이루고있다.

두 나라의 과거청산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전범국이며 가해자인 도이칠란드와 일본이 피해국들과 그 나라의 인민들에게 끼친 온갖 고통과 불행, 손실에 대한 물질적배상을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나라들이 지난날 다른 나라들을 비법적으로 침략하고 강점통치하면서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충분히 배상하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서 근본내용으로 된다.

그러나 두 나라는 과거청산에서도 성실성과 철면피성의 상반되는 대조를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도이칠란드는 잘못된 과거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허심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을뿐만아니라 실지행동으로 물질적배상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이 나라는 이러한 정책적기초우에서 국제법에 의하여 규제된 의무적인 전쟁배상금제외하고도 스스로 보상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 국가는 물론 개별적기업체들도 철저히 보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서도이칠란드정부는 《전쟁희생자원조법》(1950), 《련방보충법》(1953), 《련방보상법》(1956), 《련방반제법》(1957), 《련방보상종결법》(1965) 등 보상과 관련한 국내법들을 제정하고 국가적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을 실행하였다.

또한 1959년에는 룩셈부르크, 1960년에는 프랑스, 1962년에는 벨지끄 및 에스빠냐, 1963년에는 오스트리아 등 각국들과 협정을 맺고 나치스의 박해로 자유박탈 또는 피해를 입은 주민, 나치스군대에 의해 전장에 끌려가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추가보상을 실시하였다.

랭전종식후 도이칠란드정부는 로씨야와 동유럽나라들로 보상계획을 확대실시하였으며 한번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성근한 자세에서 추가보상을 실시하였다.

실례로 1999년 12월 도이칠란드정부와 기업체들은 공동기금 《기억, 책임,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정부가 50억DM, 기업체들이 50억DM를 내어 총 100억DM를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씨, 폴스까, 체스꼬 등에 지불하였다.

당시 도이칠란드의 요한 네스라우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강점된 나라들의 로동력을 고용하였던 개별기업들에 직접 친서를 보내 보상금기부를 고무격려하였으며 《기억, 책임, 미래》재단은 보상금기부를 거부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압력까지 가하였다.

결과 많은 기업들이 보상사업에 참가하였다. 레컨대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강제수용소에서 사용된 독가스를 생산하였던 기업인 IG화르벤회사는 50만DM를 지출하여 강제로동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독립재단을 설립하고 실행하였다.

도이칠란드의 종교단체들까지도 보상에 참가하였다.

도이칠란드카톨릭교회는 2000년 8월 29일 나치스시기 도이칠란드카톨릭교회에서 강제로동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500만DM를 독자적으로 지불한다고 밝히고 실행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도이칠란드정부는 2001년 6월부터 2004년 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세계 80여개 나라에서 살고있는 나치스에 의한 강제로동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27억 3 800€를 추가로 보상하였다.

2004년 8월 25일 당시 도이칠란드의 집권련립정당들인 사회민주당과 룩색당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나치스피해자들에 대한 보상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전에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그전보다 2배나 많은 보상금이 지불되고 보상대상자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대한 도이칠란드의 성실하고 투명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이에 비해볼 때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태도는 철면피성의 극치를 이룬다고 할수 있다.

패전후 일본의 배상은 총적으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대일정책에 따라 배상의 규모가 매우 작고(미국, 영국, 네데를란드, 중국국민당 정부 등 여러 나라들이 배상금청구권포기) 일련의 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미국 등 서방나라들과 그 영향하에 있는 나라와 지역들에 치중된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특히 일제에 의하여 가장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당한 우리 나라에 대한 배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에서 40여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가장 간악한 방법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탄압학살하고 우리 나라의 재부를 깡그리 략탈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시기에 《국가총동원법》(1938. 4.), 《국민징용령》(1939. 9.),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1938. 2.), 《해군특별지원병령》(1942. 7.), 《학도병제령》과

《징병제령》(1943. 11.)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만주와 일본령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침략전쟁이 벌어지는 모든 곳에 징병, 징용, 일본군성노예로 강제련행하여 학살하였다.

이 시기 41만여명의 조선의 청장년들이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려가 죽음을 강요당하였으며 연 778만여명이 탄광, 광산, 군수공장, 군사시설공사장들에 끌려가 노예적로동을 강요당하였다. 10대의 소녀로부터 40대의 유부녀에 이르는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이 강제련행되어 성노예적학대를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침략전쟁의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만들고 광물자원을 비롯한 조선의 자연부원을 무제한 약탈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낫그릇과 여성들의 비녀에 이르기까지 깡그리 약탈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의 초시기인 1942년현재 군수공업에 소요된 연의 35%, 인조석유의 39%, 금의 55%, 철광석의 57%, 탕그스텐의 90%, 몰리브덴 및 석면의 80%, 형석의 90%, 흑연 및 운모의 100%를 조선에서의 약탈로 충당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사실상 자원이 빈약한 섬나라인 일본이 조선의 인적, 물적자원약탈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할수도, 진행할수도 없었다.

이 모든 죄행은 철두철미 일본국가와 군부에 의하여 계획되고 감행된 국가범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력대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전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청산을 회피하고있다.

그 주요한 구실은 일본의 조선《합병》과 그에 따른 조선통치는 합법적이므로 조선과 일본사이에는 배상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권》문제만이 존재하며 또한 이 시기 조선과 일본이 교전관계가 아니였기때문에 배상은 전혀 부당하다는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물질적배상을 회피하려는 강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일제의 강도적인 조선침략의 산물인 1905년의 《을사5조약》과 그 기초우에서 조작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의 불법무효성은 이미 북남조선의 학계가 명백히 론증하였다.

우리 나라가 국제법적으로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것은 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과 다시 공모결탁한 미국의 적대시적인 대조선정책에 기인된다.

조선인민은 장구한 기간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1930년대초 이후부터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국내외에서의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패망을 가져오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인민적인 혁명전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교살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활동과 참패상에 대하여 일본인들이 서술한 력사기록들도 증명해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일간의 관계는 교전관계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으로서 일본이 내드는 구실이 부당하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월남(4년 11개월), 타이(4년 8개월), 만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3년 6개월), 필리핀(3년 7개월), 인도네시아(3년 5개월) 등 나라들에도 배상을 하면서 40여년간 강점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우리 나라,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을 벌리고 다른 련합국들과 최후의 대일작전에 참가하여 일제에게



결정적인 정치군사적타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한 고유한 의미에서의 전승국인 우리 나라에는 한푼의 배상도 하지 않았다.

1991년 1월부터 2000년까지 우리 공화국과 일본사이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차례 진행(1~11차)되고 조일평양선언도 채택되었지만 일본은 여러가지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국교정상화의 필수적인 전제인 과거청산을 회피하였다.

이것은 1990년 9월 일본의 자유민주당, 사회당대표단이 평양에 찾아와 조선로동당과 함께 발표한 3당공동선언에서 과거 일본이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갖다준 사실과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과거청산원칙에서 탈퇴하여 과거의 역사적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억지날조였다.

일본이 과거청산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남조선과의 관계문제에서도 그렇다.

1965년에 체결된 남조선-일본《협정》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과거식민지통치의 죄행에 대한 사죄나 배상이라는 표현을 찾아볼수 없으며 오직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있을뿐이다.

그것은 《기본관계조약》에서 《쌍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조선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이 《이미 무효》(이미라는 개념은 1948년 8월로 규정함)임을 확인한다고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일제의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에서 일본은 남조선에 3억US\$를 《독립축하금》(당시 1 080억 원으로 환산되는 3억US\$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로무를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는것)의 명목밑에 던져주는것으로 과거청산을 대치하였던것이다. 그리고는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과거문제가 《완전 또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것을 확인한다.》고 쫓아박았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이루 말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 인적, 물적자원의 약탈을 어찌 명분도 똑똑치 않은 3억US\$로 대치할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본질에 있어서 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과거청산을 대하는 일본의 교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들이 있다.

2015년 8월에 일제시기 송림에 검이포제철소를 세우고 조선의 부원략탈에서 악명을 떨친 전범기업체인 미쓰비시재벌은 세계여론의 규탄에 못이겨 태평양전쟁시기 자기 기업에서 강제로동에 시달린 일부 미국과 영국인 지어 오스트랄리아인들에게도 용서를 빌면서도 조선사람만은 제외된다는 교악한 망발을 쳤었다.

또한 지난 시기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에서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 구일본군인들의 유골수집을 위해 국내외에서 수백차의 현지조사 및 유골수집을 진행하고 수년간에 걸쳐 DNA감정을 실시하는데만도 600억 원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일본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발굴과 보존을 위해서는 한푼의 돈도 지출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은 성실하게 과거청산을 대하는 도이칠란드와 어떤 오그랑수를 써서라도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태도가 상반되는 대조를 이룬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 2. 3.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에 대한 규탄

과거를 부정하고 청산을 회피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는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세계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하고있다.

심지어 일본의 가까운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까지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를 추궁하고있다.

도이칠란드의 저명한 역사학자이며 교수인 한스 올리히벨러는 기자회견에서 과거범죄를 반성하지 않고있는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는 《...도이칠란드나 기타 다른 나라의 견지에서 보아도 일본이 죄책감을 느끼는것은 응당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60년이 훨씬 지났지만 일본이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는것은 참을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은 교과서에 과거전범죄를 사실 그대로 묘사한것이 없다.》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후 어떻게 과거청산을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이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위해 도이칠란드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6년 12월 이전 미국대통령은 일본정객들이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는것은 《력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력사의 상처를 가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 2007년 7월 12일부는 일본의 력사외곡을 규탄하는 광고에서 《력사를 수정하기 위한 일본국우익세력의 움직임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일본당국자들은 진실을 부인하는 철면피한 행위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규탄하였다.

미국회(2007. 7)와 필리핀국회(2008. 4.), 네델란드국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 국회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일본군이 감행한 성노예범죄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하며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미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톰 랜토스는 결의채택발언에서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잔학성과 규모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그 어느 나라도 과거를 무시할수 없다, 도이칠란드는 전후에 과거사를 반성하는 옳바른 선택을 한 반면에 일본은 력사적사실에 대한 망각을 조장시켜왔다고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14년 9월 18일에 발표한 2014년판 《전략개관》에서 과거 식민지시대에 대한 력사인식을 재검토하려는 일본수상 아베의 시도는 일본을 후퇴시켰다고 하면서 《수상 아베의 력사인식에 관한 립장이 일본의 국제적고립을 가져올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일본국내의 량심도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고있다.

일본 교토부의회는 2013년 3월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한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의견서는 《피해를 입은 녀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며 리해를 얻을수 있는 배상을 진행하는것은 일본정부에 남겨진 책임과 임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의견서는 정부가 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성실히 그리고 빨리 하며 력사의 사실과 교훈을 옳게 이어받게 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이것은 2000년대초에 한 고령의 일본인이 과거 일제의 침략과 범죄의 역사에 대한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파렴치성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한 말이었다.

당시 일본기자 혼다 쇼이찌는 《빈곤한 정신, 유괴, 살인, 체포, 강간, 린간-〈종군위안부〉의 실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노예범죄문제를 비롯한 과거죄행을 회피하는 자기 정부의 비렬한 변명과 뻔뻔스러운 태도를 타매하면서 《일본정부가 ...보인 태도는 매번 해대는 짓이기는 해도 아연실색할 파렴치하고 비렬한 반국제적인것이다. 일본인은 이렇게 평장한 거짓말을 해대고 파렴치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놓을수 있는 민족이었던 말인가. 나도 이 민족에 속하는 일본인이란 말인가.》고 개탄하였다.

### 3. 결 론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지난 시기 일본이 조선인민과 인류앞에 저지른 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리거나 지워버릴수 없다.

과거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도덕적책임이다.

죄를 지었으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책임을 성근하게 지는것이 인간사회의 료리, 국제사회의 도덕이다.

그러나 오늘 일본에서는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그와는 반대되는 군국화의 역풍이 불어치고있다.

수상을 위시로 하는 일본당국자들은 과거 대일본제국시대를 꿈꾸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전면부정하고 허울만 남은 《평화국가》의 면사포마저 벗어버리는 정책을 추구하고있다.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우는 현행헌법을 파기하고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명기한 새 헌법을 조작하기 위한 일대 바람이 불고있으며 수상 아베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본이 추구하는 군국화의 길은 곧 자멸의 길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적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이 살려면 군국화의 길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도이칠란드처럼 과거죄악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과거청산, 역사외곡, 배상